

## 2023년도 연구활동 (최종)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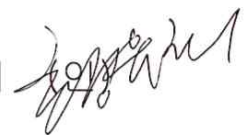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3년도 연구활동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                                    |  |
|----------------|--------------------------|----------------------------------------------------------|------------------------------------|--|
| 연구단체명          |                          | 안성시의회 안성시 인구정책 연구회                                       |                                    |  |
| 연구<br>내용       | 연구주제                     | 안성시 인구유입 및 인구증가를 위한 조례 및 정책연구                            |                                    |  |
|                | 연구목적                     | 안성시 인구정책 현황 및 실태를와 타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우리시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함. |                                    |  |
| 연구<br>활동<br>비용 | 수령액                      | 금일천사백칠십만원 (₩14,700,000)                                  |                                    |  |
|                | 집행액                      | 금일천사백칠십만원 (₩14,700,000)                                  |                                    |  |
|                | 잔 액                      | 금일천사백칠십만원 (₩14,700,000)                                  |                                    |  |
|                | 집행내역<br>(최종견적는<br>천단위절사) | 인건비                                                      | 금일천일백삼십일만사천육백칠십사원<br>(₩11,314,674) |  |
|                |                          | 경비                                                       | 금일천삼백육십만원 (₩1,360,000)             |  |
|                |                          | 일반관리비<br>및 이윤                                            | 금육십구만삼천오백오십팔원 (₩693,558)           |  |
|                |                          | 기타<br>(부가가치세)                                            | 금일백삼십삼만육천팔백이십삼원<br>(₩1,336,823)    |  |
| 특기사항           |                          | 붙임자료 참고                                                  |                                    |  |

- 붙 임 1. 2023년도 연구활동 최종결과보고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의원연구단체 최종보고서 1부.

2023 년 11 월 30 일

대 표 자 : 황 윤 희



안성시의회 의장 귀하

[붙임1]

# 2023년도 연구활동 최종결과보고서

## - 안성시의회 안성시 인구정책 연구회-

- ▶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연구활동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I

## 의원연구단체 등록현황

- 연구단체명 : 안성시의회 안성시 인구정책 연구회
- 소속의원명 : (대표) 황윤희, 이관실, 최승혁 의원
- 단체등록일자
  - 2023. 3. 13. :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제출
  - 2023. 4. 12. :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개최
  - 2023. 4. 14. : 의원연구단체 심사결과 통보

### II

## 의원연구단체 주요내용

### 1 연구용역 진행

#### <연구용역 현황>

- 용역명 : 안성시 인구유입 및 인구증가를 위한 조례 및 정책 연구
  - 안성시 청년 및 외국인 정책을 중심으로
- 과업기간 : 2023. 7. 17. ~ 11. 13. (착수일로부터 약 4개월)
- 용역사 : (주)제윤의정(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6길 13-1, 2층, 대표 윤금례)
- 연구원 : 한경대학교 박종혁 교수
- 보고회 : 3회 개최(착수, 중간, 최종)

## ▶ 착수보고회

- 개최일시 : 2023. 7. 24. 16:00 / 소통회의실(안성시의회 3층)
- 보고내용

### 1] 문제제기 및 안성시 현황

-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감소 시대에 도래하였으며, 인구정책은 크게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안성시 인구규모와 인구증감율 변화 수치를 보면 2010년 이전 연간 인구증가율이 최대 4.4%에 이르렀으나, 2011년 이후 급격히 낮아지고 있음.
- 또한 최근 10년간 안성시 합계출산율을 1.404명에서 0.85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지만, 전국의 합계출산율 보다는 높음.
- 최근 10년간 안성시는 매년 2,500명~3,000명 전입인구와 전출인구가 발생하고 있음.
- 안성 1~3동, 공도읍, 대덕면 원곡면, 삼죽면은 청년인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개면, 서운면, 양성면, 일죽면, 죽산면은 노년인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2] 안성시 인구정책 연구과정

- 안성시 지역 특성을 분석
- 안성시 인구변화 분석
- 중앙정부 인구정책 조사
- 경기도 인구정책 조사
- 유사 지자체 청년정책 조사
- 분석방법 및 절차 : 자료수집→데이터 추출 및 분석→시사점 도출→보고서 반영

## ○ 보고회 사진



## ▶ 중간보고회

○ 개최일시 : 2023. 9. 26.(화) 16:00 / 소통회의실(안성시의회 3층)

○ 보고내용

### ① 연구용역 취지

- 안성시 인구정책 현황 및 실태와 타 지자체 정책을 비교하여 안성시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 안성시 인구정책 중 소수자 정책(청년과 외국인)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안성시 상황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② 과업의 주요 내용

- 지자체 인구정책과 청년정책에 대한 범위와 분류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고, 인구정책의 Trend 분석을 통하여 안성시에 맞는 인구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또한 지자체 별로 다른 '청년'의 기준에 따라 청년정책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경기도 청년정책과 안성시 청년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명함.
- 안성시 장래인구에 대한 현황을 연도별, 인구피라미드 모형 활용, 인구지표(인구성장률, 노령화지수, 중위연령), 청년인구로 분류하여 미래인구를 추계함.
- 안성시 등록외국인 현황을 분석함. 분기별 외국인 수를 비교하여 2020년부터 현재까지 등록 외국인 수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령별, 읍면동별, 국적별, 비자 종류 등 다각도로 등록외국인 현황을 파악함.
- 안성시 청년 인구수 감소에 대한 현황과 안성시에서 추진했던 청년정책 관련 간담회 결과(안성시 청년위원회 청년위촉위원, 안성시 소재 대학 대표자, 안성시 다문화지원센터 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성시 청년정책의 문제점과 청년사업 예산 현황을 파악함.
- 중간보고 이후, 안성시 청년정책에 대한 분석을 위한 예산 및 결산 흐름을 파악하고, 관련된 정책을 분석하고자 함. 이에 대한 한계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정책개발을 위한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논의함.

○ 보고회 사진



## ▶ 최종보고회

○ 개최일시 : 2023. 11. 9.(목) 16:00 / 소통회의실(안성시의회 3층)

○ 보고내용

### ① 인구정책의 개요

- 인구정책은 세계적으로는 유엔 인구기금(UNFPA)에서, 한국은 보건복지부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음.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주요 10대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출산 장려 정책, 보육 및 교육 지원 정책, 청년 지원정책, 일자리 창출 정책, 주거 정책, 고령화 대응 정책,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다문화 및 이민자 정책, 인구 구조 개선 정책,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
- 인구정책 중 청년정책은 청년들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이러한 정책을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며 청년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실행해야 함.
- 또한 인구정책으로서 다문화 및 이민자 정책은 이민자들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사회의 다양한 면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개발해야 함.

### ② 안성시 인구 통계 분석

- 안성시 총인구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총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인구증가변수(출생, 전입청년, 혼인)과 인구감소변수(사망, 전출청년, 이혼)를 설정하여 월간(120개월) 단위로 통계치를 산출함.
- 통계분석 결과, 유의미한 값으로 총인구와 관련된 변수로는 출생, 혼인, 사망이 있었으며, 나머지 독립변수들은 크게 유의미하지 않음.
- 따라서 단순히 출생률만 높이는 정책보다는 다른 복합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인구증가(유입)를 이끌어내야 하며, 총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가 있는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③ 타 시·군 비교 및 안성시 분야별 정책 및 조례 제정 방향

- 안성시는 현재 경기도와 연계한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자리 및 창업, 교육 및 자기계발, 주거 및 복지, 생활문화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AHP조사에 의하여 안성시와 유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청년과 관련된 조례의 수가 타 시·군(목포, 광양, 의왕, 구리, 김천)에 비해 비슷하거나 많은 편임. 또한, 외국인 및 다문화 관련 조례의 수 또한 타 시·군(강릉, 양산, 광명, 김천, 철원, 여수)와 비슷함.

- 안성시는 추후 청년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가정을 이루며,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정책지향점을 '아키 키우기 좋은 젊은 도시'로 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함.
- 외국인 정책으로는 포용성, 다문화 공존, 지역사회 통합, 경제적 기여 및 상호 문화적 이해와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단순히 안성의 모든 외국인(또는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직접 조례를 제정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들을 고용하는 고용기업,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④ 안성시의회 의 역할

- 시의회는 정책의 입안, 심의, 승인을 통해 청년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 인구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함.
- 따라서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정책 입안과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가 정책을 실행 할 경우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 사항을 제시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함.

#### ○ 보고회 사진



## ② 연구활동 보도자료

- 경기신문, CNB뉴스, 경인매일, 중부일보, 뉴스프리존, 뉴시스, 엔디엔 뉴스, 데일리와이, 경인투데이뉴스, 한성일보, 웰이코노미, 서울일보, 데일리연합, 메타TV뉴스, 미디어이슈, 케이에스피뉴스, 미디어투데이, 뉴스후, 경기IN, 경기인터넷신문, 내외일보, 수원인터넷뉴스 등

- 배포일자 : 2023. 11. 10.(금)

###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구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연구용역 결과 향후 조례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청년, 외국인 정책 발굴에 힘써야”

안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성시 인구정책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지난 9일 시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인 황윤희, 이관실, 최승혁 의원과 연구용역을 담당한 정책연구전문기관인 ‘제윤의정’이 참석했다.

‘안성시 인구유입 및 인구증가를 위한 조례 및 정책연구’는 안성시 인구 현황을 파악하고, 청년과 외국인의 소수자 정책 발굴에 연구의 초점을 맞췄다. 타 지자체와의 정책 및 사례 비교를 통해 안성시에 맞는 조례와 정책을 발굴하고자 한 것으로,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진행되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안성시 인구 및 청년인구 통계분석 △안성시 등록외국인 현황조사 △분야별 정책 및 조례 현황 △안성시 청년 및 외국인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후 안성시 인구정책에 대한 시의회, 집행부의 역할 대한 제언과 토의도 이루어졌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경대학교 박종혁 교수는 “출생과 총인구의 상관관계 등을 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한 것들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견된 유의미한 결과들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의원연구단체 대표 황윤희 의원은 “시의회가 인구정책 연구회를 운영한 것 자체만으로도 안성시 차원에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면서, “안성시가 향후 3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유입 정책과 점점 늘어나는 다문화, 고려인 등 외국인 정책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관실 의원도 “연구회 최종 결과물을 향후 집행부와 공유하여 안성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에도 관련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친 연구회는 내달 말까지 활동을 이어간 뒤,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최종심의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 Ⅲ

### 참여의원 총론 및 소고

#### ○ 참여의원명 : 황윤희(대표), 이관실, 최승혁 의원

- 대한민국 출산율이 유례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보다 낮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미국의 한 교수가 한국 출산율을 듣고 “한국은 망했네요” 라고 말하는 밈이 온라인 상

에서 사람들 이목을 끌기도 했다. 23년 하반기 출산율은 0.7명도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16년간 출산율 증가를 위해 280조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 어느 정책도 출산율 증가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는 보고가 없다. 한국 경제가 장기저성장의 길로 접어든 가운데, 바닥인 출산율까지 보태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 수도권에 포함되는 안성시의 경우 인구는 줄고 있지는 않지만 안성시가 목표로 하는 30만 자족도시로 나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안성시 인구는 2018년 194,954명, 2020년 198,234명, 2022년 200,932명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외국인 인구가 포함된다. 외국인 인구의 경우 2018년에 11,375명, 2020년에 11,222명, 2022년에 12,090명을 기록했다. 2022년 기준 안성의 외국인 인구의 비중은 6%를 넘는다. 내국인의 인구는 5년간 5,263명 증가한 셈이고, 외국인의 경우 715명이 증가한 상황이다.
- 인구증가율을 보면 2022년 안성 인구증가율은 0.26%를 기록했다. 이는 경기도 0.33% 보다는 낮은 수치이고, 전국의 -0.38%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더욱 큰 문제는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한다는 점이다. 2013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130개월의 인구데이터 그래프를 보면, 안성시의 19세 이하 인구는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대의 경우 약간의 변동을 보이며 큰 차이는 없지만, 이러한 추세는 30세~45세까지 동일하게 이어진다. 50대는 거의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60세 이상부터는 확연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놀라운 점은 도시화가 이뤄지고 있는 공도읍 또한 15세 이하의 인구가 감소했고, 30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아동청소년층과 청년층 인구가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안성2동과 3동이라 하겠다. 이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아파트 입주가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안성 총인구의 큰 변화 없이 관내에서의 이동이라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어쨌든 안성시의 고령화, 인구정체 등의 전반적인 흐름은 대한민국의 인구추이와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 결과적으로 안성시의 인구 고령화가 확연하고,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 안성시의 소멸위험도가 비교적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의 변방이라 불리는 안성이 이와 같은 추세를 이어간다면 도농복합도시로서 무늬만 수도권이라는 현재의 지위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에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황윤희, 이관실, 최승혁 의원은 ‘안성시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및 조례 연구회’를 발족시키고, 고민의 발판을 마련해보고자 했다.

## ○ 의원연구단체 경과

### 1) 연구용역비 사용의 한계

- 의원연구회를 발족시키면서 ‘안성시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및 조례 연구회’로 이름을 명명했다. 상위법에 따라 각 기초의원들에게는 연구용역비 500만원씩이 주어지고, 이는 연구용역 발주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목적이 한정된 예산이다. 이에 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3명의 의원은 마음을 모아 의원연구회를 꾸리고 1,500만원 예산 내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었다.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관들에 연락을 넣어봤지만 기본은 5천 이상은 돼야 한다고 했고, 최하로 잡아도 3~4천은 필요하다고 했다. 1,500만원 수준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수행하게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연구용역기관이 수행가능하다는 답변을 줌으로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하지만 최초의 착수보고회에서 주제와 관련된 논의를 진척시켜보니 실제로 우리가 기대했던 연구를 다 하자면

억 단위의 용역비가 필요하는 답변을 받았다. 최초에 우리는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및 조례연구회에 걸맞게 안정인구 변화와 증가방안 전반에 대한 과업을 연구용역에 담았다. 말하자면 ▲읍면동 별 인구변동 추이 분석 ▲연도별 출생률 현황(전국, 경기도, 유사지자체 비교) ▲연도별 고령인구 추이 분석 ▲안성 지역별 인구소멸 위험도 산정 ▲고령화 해결을 위한 방안 연구 ▲안성시 전입·전출 요인 분석 ▲전입과 전출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안성시 귀농·귀촌인 실태조사 ▲안성시 고려인 및 외국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안성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인구유입을 위한 타 지자체 정책 비교 ▲산업부문, 주거 부문, 문화교육 부문 조례 비교연구 등을 과업내용에 담았다.

- 하지만 이러한 과업내용은 최초의 착수보고회에서의 토론을 통해 대폭 조정되었다. 실제로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은 전 분야에 걸쳐 있었으며, 그 분야를 다 연구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실제로 시민이 어느 지역에 정착해서 산다는 결정을 내릴 때 단지 한두 가지의 조건을 보고 주거지역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기는 했다. 말하자면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은 주거, 교육, 산업, 일자리, 환경, 문화, 보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있었고, 따라서 인구정책 내에 포함되는 전 분야를 일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런 점을 고려해야 했다. 아울러 특히 소액을 투자해 이뤄지는 연구용역이 의미를 갖자면 연구분야를 한정하고 범위를 축소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자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 2) 과업범위 조정

- 최초의 과업내용은 그리하여 토론을 통해 조정되었다. 의원연구회는 토론을 통해 우선 안성의 인구증가에 단기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로서 외국인을 꼽았다. 실제로 안성시 인구의 6.6%가 외국인이었고 추세 또한 증가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23년 9월 기준, 안성시 총 인구는 20만 2,914명이며, 이중 외국인은 1만3,458명이다. 외국인 인구의

증가로 실제로 지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외국인과의 화합, 융화, 갈등이 문제가 되었고,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적응문제 또한 심각했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한국어가 되지 않아 기초적인 소통도 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이주배경 청소년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함께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내국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다. 안성시의 선도적인 정책 발굴과 실현이 필요한 상황. 하지만 안성시의 외국인정책은 건강가정다문화센터, 내리안 다문화센터 운영을 통한 다문화가족을 위주로 한 정책이 전부였다.

- 이에 우선은 외국인 현황, 외국인 정책을 과업내용의 한 분야로 선정했다. 대한민국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지역사회에 잘 흡수되도록 하는 문제는 중요해 보였다. 실제로 이미 많은 지자체가 외국인 인구 유입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실현하는 중이다. 특히 고려인의 경우에는 안성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동포를 잘 받아들이고 지역민과 자연스럽게 융화하게 만드는 문제는 향후에도 매우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 두 번째로는 청년정책을 과업내용으로 삼았다. 안성시의 인구구조를 보면 0세~14세 인구는 2018년 13.4%에서 2022년 11.2%까지 하락했다. 전국 평균인 1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또 15세~64세의 경우에는 2018년 70.6%에서 2022년 69.6%로 이 또한 전국 평균인 70.5%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경우 2022년 기준 36,284명으로, 전체의 1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8년 16.0%였던 것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전국 평균 18.0%도 웃도는 비중이다. 안성시민 5명 중의 1명은 노인인 셈이다.
- 이에 연구회는 연구용역의 또 다른 주제로 청년층 유입을 이룰 수 있는 정책방안 연구를 잡았다. 지역사회가 활력이 넘치려면 청년층 유입이 이뤄져야 하고 청년층 유입이 이뤄져야 출생률 증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결정에는 지자체의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안성시 예산 분배를 보면 노인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 대비, 청년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은 극도로 낮다. 청년 또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안성시청에 전담팀이 있거나 하지 않았다. 청년 일자리 지원 등과 같은 소소한 사업들은 있으나 청년층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 자체사업 또한 없다.

- 의원연구회는 이런 과정을 거쳐 외국인과 청년이라는 두 분야에 주제를 특정하고 이후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과업 범위 조정절차를 거쳤고, 4개월 간의 연구용역기간을 보내고 이와 같은 최종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 아쉬운 점은 연구용역비의 한계로 인해 안성 거주 외국인과의 인터뷰, 대면조사, 청년들과의 인터뷰, 대면조사 등은 포기해야 했다는 점이다. 청년층의 경우, 2017년에 도출된 청년통계가 있었지만 외국인의 경우 자료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향후 안성시가 청년층과 외국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의원연구회 운영에서 개선할 점

- 초선의원들의 일천한 경험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 시행착오가 있었던 셈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의원 1인당 500만원이라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정해진 연구용역비를 이용해 연구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안성시의회는 총 8명의 의원이 있고, 그 8명의 연구용역비를 모두 합하더라도 4천만원 수준이니 그 안에서 유의미하고 가치있는 연구용역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서로 다른 당적을 갖고 있는 의원들 모두가 의기투합해 하나의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일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듯하다.
- 회계 문제 때문에 1년 단위로 설정된 연구회 운영기간도 아쉬움이 있다. 조례 발의,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지역의 온갖 행사에 수시로 다니며 의정활동을 펼쳐야 하는 기초의원들에게 1년이란 시간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연초에 연구회 구성을 결의하고 심의를 받아 발족시키고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용역기관을 찾아 발주하고 토론을 통해 연구기간을 정하고 운영하고 연말 내에 회계 및 심사까지 모든 일정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다. 그 기간 동안에 심도 있는 연구, 현실에 적용가능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연구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향후 의원 연구용역비 집행기간 또한 가능하다면 연 단위를 넘어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전국적으로 기초의회 의원의 70% 이상이 초선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회 운영의 문제를 초선의원의 경험의 일천함만을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따라서 기초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의회사무과의 역할이 주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연구회 발족에서부터, 주제 선정, 운영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의회사무과가 적극 개입해 조언을 전하고 방향성을 정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24년에는 또 다른 의원연구회가 발족될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이곳에 길게 서술하는 이유도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 ○ 외국인 정책 관련

### 1) 안성시 내 외국인 전담인력 구성 시급

- 외국인 인구비중 6.6%. 20명 중에 한 명은 외국인으로, 대다수 외국인은 안성시에서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으며 세금을 내고 있다.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활동의 주체의 한 축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안성시에 외국인 전담 인력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행정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가족여성과 내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내리안다문화가족센터를 담당하는 인력이 한 명 있지만, 그 이상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이에 안성시에 외국인 전담인력 확대 또는 외국인 전담팀 구성을 제안하는 바이다.

- 안성시에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고삼면으로서 23년 10월 말 기준 1,892명의 면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고삼면 주민센터에 면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무하는 인력은 약 17명이다. 안성의 외국인 인구수는 고삼면민 수의 7.2배에 이른다.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외국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인력을 두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 2)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급, 전향적 검토 필요

- 안산시의 경우, 2018년부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급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화성시는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화성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다. 화성시의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정책에서 매우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는 현재 전국 1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까지 받는 쾌거를 이뤘다.
- 현재 안성시도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자녀(만3세~5세) 1인당 보육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23년 소요된 예산은 1억 8,960만원이다. 당장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늘여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는 아동친화도시라는 안성시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어떤 아동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천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 3) 타 지자체 외국인 정책 벤치마킹 필요

- 전국 지자체 가운데 외국인 거주 1위 지자체는 안산시이다. 안산시는 118개국의 외국인 10만1,850명이 거주하고 있다. 안산시는 외국인 특화도시로 자리매김했고, 다양한 외국인 정책을 만들어 전국에 전파하는 등, 우리나라 외국인 정책의 표준을 수립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에는 다문화마을특구를 지정했으며, 2012년에는 다문화도시협의회 창립을 주도했다.

- 특히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전담기구를 설치했다. 시청 소속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두고 그 아래 외국인주민행정과와 외국인주민지원과를 두고 있다. 두 과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30명이 넘는다.
- 아울러 최근에는 이민청을 유치하겠다고 발표, 실현에 나서고 있다. 이민청은 전국 이민 행정서비스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 안산시에 비하면 안성시의 외국인 인구는 10% 수준이지만, 정책적 부분에서는 안산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성은 중소기업과 산업단지가 산재해 일자리가 많다. 제조업이나 소기업이 많아 외국인 고용이 많고 향후에도 확대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어서 외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안성시의 출산율이나 전입인구를 늘여 인구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유입을 늘이는 것은 향후 안성의 경제규모를 키우는 주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4) 외국인 및 다문화 특구 만들어 문화적 다양성 증대해야

- 대덕면 내리 같은 경우, 이미 거주 외국인이 많아 시민들에게 특별한 구역처럼 인지되고 있다. 자연발생적으로 내리 쪽으로 외국인이 모였다면 이제는 행정이 나서서 외국인특구, 다문화특구 같은 시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외국인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안성시의 다양성을 증대시킨다는 면에서 지역을 위해서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안성이 외지 관광객 유치에 특별한 장점이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기반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증대시킨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베트남, 중국은 물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프카니스탄, 러시아 등 많은 국적의 외국인들이 지역 내에 자국음식점을 열고 있다. 이는 물론 외국인들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개점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거나, 문화적 다양성을 일반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외국음식의 거리 등을 지정하고, 행정적으로 지원, 뒷받침한다면 특색있는 거리 조성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의 문화다양성 증대는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 5) 고려인특구지정, 고려인문화원 설립, 러시아어 안내판 설치사업 필요
- 고려인은 1910년 한일강제합병이 이후 국내에서 활동하던 의병들이 연해주 지역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정의된다. 이들이 고려인의 시초로서, 1919년 3.1만세운동 이후에는 많은 민족지도자들이 연해주에 모여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당시 이미 자리를 잡고 살아가던 연해주 거주 동포들은 독립운동을 위해 모여든 독립운동가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었고, 독립투사들에게 거사 자금과 식량, 병사들을 제공했다.
  - 이후 1930년대 스탈린의 정치탄압과 소수민족에 대한 억압이 이뤄지면서 고려인들은 강제이주를 당하게 된다. 특히 1937년 스탈린은 극동지역에 거주하던 한인들 전원에게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전면 이주조치를 명령했다. 이주당한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의 열악한 환경에 맨몸으로 적응해야 했으나 그곳에서 한민족의 거주공간을 개척하고 삶을 이어나갔다.
  - 고려인은 과거 대다수가 자금을 모아 독립운동에 기여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인정되며, 남북에 대한 균형된 거리감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통일 한반도를 위해서도 의미 있는 존재라 평가된다.
  - 안성시에 이러한 고려인 3세, 4세가 많이 이주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인원이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성시의회에서는 지난 7월 ‘고려인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는 등 최초의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다.
  - 아울러 고려인문화원, 고려인특구, 고려인 대안학교 등의 논의가 지역사회에서 시작되고 있는 상황으로, 안성시는 적극적으로 이들을 지역사회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고려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대덕면 내리의 경우, 언어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고려인을 다방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고려인문화원 건립, 러시아어로 된 각종 안내판 개설 등의 사업을 제안하는 바이다.

## ○ 청년 정책 관련

- 1)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층에 대한 인식 강화해야
  - 정책대상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층으로 구분해본다면 가장 열악한 공공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 청년이라 판단된다. 단적으로 안성에 미등록 경로당 13개소를 포함해 490개 경로당이 있는 반면, 청년을 위한 공간은 지난 9월에 개소한 청년공간 ‘청년톡톡’이 유일하다. 사정이 이러한 배경에는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적고, 유권자로서의 주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안성시는 현재 무상교통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노년층 무상교통에 이어 청소년과 청년층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려고 했지만 안성시의회 다수당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다.
  - 안성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층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실현해야 한다. 지역의 인구가 고령화할수록 지역경제도 위축될 것이며, 청년층이 찾는 시설이 점점 줄어들면 청년층 인구유출 또한 점점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안성시에 거주하는 청년층은 즐길거리, 놀거리, 먹거리를 찾아 이웃한 평택이나 천안을 주로 찾고 있는 형국이다.
  - 아울러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심도 있는 통계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는 2017년 이후, 청년통계를 내지 않았다. 정보와 데이터가 기반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정책실행이 어렵다고 할 것이다.

## 2) 청년정책 전담인력 강화해야

- 안성시의 인구가 점점 고령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통해 청년인구를 늘여야 하는 것이 안성시의 절대적 과제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에는 청년정책 전담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이 청소년과 청년업무를 함께 본다. 청년정책 전담인력은 현재 1명이며, 부서별로 일부 청년정책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성시가 수행하고 있는 청년 대상사업을 보면 청년월세지원, 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청년 시정참여 확대 사업,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취업지원, 청년예술인지원, 청년주택지원,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지원, 청년예술인발굴사업 등이 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안성시는 24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정책 전담팀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과 내에 청년팀이 구성되는 것으로, 전담팀이 생기면 청년정책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청년층 대상 정책사업 예산 48억으로, 0.48% 수준

- 2023년 안성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계획된 예산은 총 555억 수준이다. 하지만 이중에는 청년 친화 행복주택 건설 사업비 492억원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는 61억원 수준이다. 시행계획과 별개로 23년 실제 집행되는 청년관련 예산 현황을 보면, 국도비 사업을 포함해 초 48억원 수준이며, 이중, 시 자체사업비의 경우 3억8,586만원에 불과했다. 국도비와 시비를 다 합쳐도 이는 안성시 전체 예산의 0.48% 수준이다.
-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예산의 경우, 청년정책위원회 수당, 분과위원회 교육비, 청년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공간 운영비 및 인건비로서 정책사업의 취지를 살리는 예산은 거의 없어 보인다. 물론 연령층을 구분

하지 않는 다양한 사업의 대상으로 청년층이 포함되겠지만, 39세까지의 청년층이 전체 인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대상으로 거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정책대상으로서 청년층의 소외는 비단 안성시만은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안성에서 공공이 청년정책을 선두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지 않고서는 사회의 흐름을 추인하는 모양새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4) 청년 관련 조례 제정하고 정책사업 발굴해야

- 안성시에 현재 제정된 청년관련 조례를 보면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안성시 청년기본소득지급 조례’,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 지원 조례’, ‘안성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안성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조례’,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등이 있다. 전체 6개 조례가 있는 상황으로 조례제정 상황은 타 지자체에 비해 많거나 적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청년층 유입을 위한 획기적인 조례나 사업은 딱히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이러한 조례 외에도 ‘청년 구정참여 활동지원 조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돼 있는 상황이다. 노원구와 비교해보면 안성시는 청년 관련해 더 많은 조례를 제정하고, 그것으로 정책사업을 발굴, 실현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특히 ‘안성시 청년 시정참여 활동지원 조례’를 제정, 청년들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그것으로 청년들의 욕구를 파악해 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5) 청년층의 목소리 담아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창구 개설 필요

- 청년정책의 추진은 단순히 행정적인 실행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청년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 그리고 참여에 대한 공공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

층의 니즈는 다른 연령층과 달리 일반적인 사업 착상만으로 접근할 경우 실패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일례로 안성시의 청년몰이 그러하다. 안성시가 의욕적으로 안성시장 내에 청년몰 조성에 나섰지만, 청년층의 랜드마크나 주요공간으로서 진일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발굴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청년층의 실질적인 참여와 의견제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목이라고 하겠다.

- 물론 안성시에도 ‘안성시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한 청년정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 등에서 시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현재 총 19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하면 9명이 청년이다. 아울러 청년정책분과 위원회도 운영되고 있다. 분과위원회는 분기별 1회 회의 개최, 분과별 1년 1건 이상의 신규정책 제안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23년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 건의사업을 포함해 17개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한 제안이 이뤄졌고, 이중 추진이 완료됐거나 추진중인 사업은 8건, 장기검토 과제로 분류된 사업은 5건, 1건은 추진불가사업으로 분류됐다.
- 이러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분과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원회에서 제안된 청년정책의 경우, 최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더 많은 수의, 더 다양한 계층의 청년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안성시는 청년포털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청년포털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으나 홍보 미흡 등으로 아직은 이용자인 청년층의 게시물은 거의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3년 7월 26일 개설된 청년포털의 누적방문자 수는 11월 23일 현재 2,283명으로, 하루 평균 약 20명 정도가 청년포털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모바일상에서 청년포털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안성시는 현재 관내 소재 대학 등을 방문해 ‘카카오톡 친구플러스’를 통한 청년층 이용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23년 기준 1천명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 향후 과제

- 의원연구회를 통해 안성의 인구문제에 대해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인구를 주제로 안성시의회 의원들이 연구를 발족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반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추측한다. 물론 연구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제출만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 이에 의원연구회는 연구기간이 끝난 향후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과 함께 고민의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공청회를 기획하고 있다. 아울러 시정질의, 집행부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 조례 제정을 통해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안성시 또한 제8대 안성시의회에서 연구 결과물을 존중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
- 황윤희, 이관실, 최승혁 의원은 제8대 안성시의회 최초의 의원연구회 운영, 연구용역 발주라는 시도가 안성시 발전에 작은 밑거름이라도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힌다.

## IV

### 향후 계획

- 2023. 11. 29. :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개최
- 2023. 11. 30. : 운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보 및 의장 보고
- 2023. 12. 中. : 연구용역비 지급 및 관련 공청회 개최 예정